

자료 제출 거부에 여야 한목소리 비판… 추미애 도정 ‘도마’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
재정 비상선언 두고 “근거 의문”
관사·차량 논란 등 집중 공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3일 경기도 국감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비상상황 선언의 근거와 대응 방식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관사·차량 논란과 중앙정치 관련 발언을 겨냥했다. 또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거부도 여야 모두 비판했다.

◆민주당 “비상상황 선언 적절했는지 의문”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정 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위기’인데 올해 2분기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13.71%에 불과하다”며 “지방세 징수액 비율은 100.92%, 금고 잔액 비율은 105.34%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기도가 재정 위기 단계가 아니며 비상선언을 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답변했다”고 전했다.

추 지사가 지난 8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데 대해서는 “지사님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도민들도 혼란스러웠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행정은 정치와 달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재정 비상 선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 지사는 경기도처럼 예산 규모

가 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채무 비율만으로 가능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최근 2년간 채무 증가 속도는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5%를 넘어 전국 1위”라며 “최근에는 행안부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사·차량’ 논란 집중 추궁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관사·차량 논란을 추궁하는 한편, 도정을 소홀히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펼쳤다. 추 지사는 경기도 도정을 펼치면서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지만, 12억원 가량 관사에 살고 7700만원 가량의 관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도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지도자가 출선수범해서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관사와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이 되는 것”이라며 “그걸로 호화 사치 이렇게 비유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반박했다.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차를 새로 준비해야 됐다”며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이라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전임 지사가 매입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자신이 키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국감을 받는 자리이기에 제 개인적인 정치 소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이 대통령 관련 질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

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자료 제출 거부엔 여야 질타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거부가 여야의 도마에 올랐다.

박상웅 의원은 추 지사 취임 이후 예산 집행이 필요한 지시 사항과 도지사 관사 계약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가 지방 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무엇을 보고 도정을 검증하라는지 알 수 없다”며 “(추 지사는) 국회의원이면 때는 자료 내라고 호통도 치고 입법도 하더니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의원 역시 전국 17개 시도에 지방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기도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자료를) 국회의원에 감춘다고 경기도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감추는 것은 결국 도민과 국민에게도 감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연금 못 내는 청년 146만명… 90%는 실직 탓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발표
납부 이력 전무 21만명·체납 4499억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는 총 146만2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직’을 사유로 든 청년이 132만2746명으로 전체의 90.4%에 달했다. 이어 재학 11만1256명, 사업중단 1만3111명, 병역 8109명 순이었다.

청년 납부예외자 전체 인원은 2021년 164만288명에서 2025년 146만 2974명으로 10.8% 감소했다. 하지만 ‘실직’ 사유 청년은 같은 기간 127만1105명에서 132만 2746명으로 5만1641명(4.1%) 늘어나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납부예외자 중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혀 없는 ‘납부 이력 전무자’는 21만1860명에 달했다. 청년 납부예외자 7명 중 1명(14.5%)은 국민연금에 이력만 올라있을 뿐, 첫 보험료조차 내지 못한 셈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3000명, 누적 체납액은 4499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료를 반씩 나눠내는 ‘사업장가입자(직장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을 말한다. 주로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 농업업 종사자 등이다. 직장인과 달리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9%의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크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 보니까 경기 침체나 매출 감소 시 보험료를 체납할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 실직, 사업 중단, 휴직 등 경제

적인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21년과 비교해 30대 체납자는 24만 7000명에서 15만9000명으로 35.6% 줄었지만, 20대는 7만8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5.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체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사회 진입 초기 연금 공백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이 늦어지고, 훗날 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줄어들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허종식 의원은 “체납 청년에게는 무리한 징수에 앞서 보험료 지원 제도를 먼저 연계 안내하고, 구직 중인 청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등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대법관 재제청 놓고 여야, 헌법 해석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與 “제청권 남용” 野 “인사 개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제청 갈등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4조2항을 두고 여야가 해석 논쟁을 벌였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헌법 제104조 2항 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

명권이라는 각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존중과 협력 의무가 전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존중과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협의”라고 부연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는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정된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을 들어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을 허락할 받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손 사무처장은 “헌법의 공백이 있고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입법부가) 입법권을 행사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북극항로 시범 운항 성공 기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에서 서명원 팬스타 아크로호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감사패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주택·일자리·포용금융에 역량 집중”

“연체채권 직접 매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금융 부담의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면서도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히 고지 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진입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짚

었다. 이어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복지신정주의 개선 6법(사회보장기본법 등)’과 관련해 “이제 신정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라며 “관계 부처는 하위 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 가구를 빠짐없이 찾아 지원하는 세부적인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 안전 패트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